조계종 불교성전 편찬 '첫발' 떼다

'불교성전 편찬 추진위' 현판식 18일 개최

1차 회의서 편찬 방향 논의
시대 · 주제별 구성안 제출돼
2020년 6월 최종원고 완성



새 시대에 맞는 조계종 최초의 불교성전 편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조계종은 4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에서 불교성전 편찬추진위원회 현판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추진위원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사상 최초의 성전 편찬은 종단 안팎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만큼 책무가 크다"며 "잘 살펴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훌륭한 성전이 편찬되기를 기원한다. 종단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상임위원장 지홍 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은 "불교 교리는 부처님 말씀을 담은 심오한 가르침이고 방대한 분량이기에 일반 재가불자들이 다가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부처님 말씀을 선별하고 새롭게 엮어 내는 불교성전 편찬 작업은 불교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판식에 이어 추진위원회는 상임위원인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과 서울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본각 스님, 해주 스님 등에게 상임위원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어 제1차 상임위원회와 기획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불교성전 편찬 방향과 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서는 개괄적인 불교성전 편찬 계획이 논의됐다. 역경원 본 불교성전, 만해 스님 편찬 불교대전, 대한불교청년회 편찬 우리말팔만대장경의 3가지 불교성전을 바탕으로 각 불교성전의 문제점 및 수정 필요사항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사무국은 불법승 체제에 따라 시대별과 주제별로 장과 절을 나누고 시대별 주요 키워드를 선정해 반영하는 안을 제시했다.

한편, 불교성전 편찬추진위원회는 먼저 올해 상반기 목차를 확정하고 7월 번역 원칙을 논의한다. 12월 원고 초안을 점검한 후 2020년 2월 불교성전 초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원고 감수 및 윤문을 거쳐 6월 불교성전 최종원고가 완성된다. 이후 10월 불교성전 일반용이 발간되며 봉정식이 열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법진 스님 가처분 기각에 '항고'

선학원 분원장 · 창건주들… "본안 소송도 검토"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징역 6월 확정판결을 받은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의 직무정지가처분 기각결정에 선학원 창건주 · 분원장들이 항고했다. 본안소송도 병행될 예정이어서 재판 결과에 다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을 상대로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40여 창건주 · 분원장들은 4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을 결정하자 1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이와 관련해 법진 스님의 퇴진을 촉구해온 선학원미래포럼 회장 자민 스님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자민 스님은 "선학원은 재단 형성과정에서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 500여 사찰의 창건주와 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단법인 성격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특수한 종교단체 성격은 무시한 채 형식적인 면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자민 스님은 이어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 선고를 받은 성범죄 전과자가 청정승풍을 창립이념으로 하는 선학원의 최고 수장인 이사장직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승려의 탈을 쓰고 불법(佛法)을 망치려는 마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선학원 이사회는 법진 개인의 호위무사나 사조직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민 스님은 "창건주와 분원장은 무지몽매한 우민이 아니다. 성추행 전과자는 덕망 높은 승려가 아니라는 것을 판단할 정도의 능력은 있다"며 "법진 이사장과 이사진이 총사퇴하고 선학원이 개혁될 때까지 모든 사법적 ·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학원미래포럼 측은 가처분 항고뿐만 아니라 본안소송을 검토해 병행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호섭 기자**

불신임 정국에 갈라지는 태고종

편백운 총무원장 검찰조사 '혐의 없음' 결과
중앙종회 "종법상 불신임은 별개 사안" 주장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태고종 행정부 수장 불신임 사태가 장기화면서 종단이 둘로 갈라지고 있다. 불신임된 편백운 스님은 자신의 비위관련 검찰조사 '혐의 없음' 통보에 총무원장서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불신임을 결의한 중앙종회는 종헌종법과 별개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종단 분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도광 · 시광 · 지담 · 도성 스님 등 일부 중앙종회의원들이 업무상 배임, 사문저 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배임수죄 등의 혐의로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4월 4일자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통지했다.

이에 편백운 스님 측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에 대한 종헌종법상 불신임이 무효임을 주장했다. 태고종 총무원은 "이번 사건은 도광 종회의장 등 8명의 오판과 무리한 집행부 견제, 종회의 월권, 법담 스님의 궤변에서 비롯된 태고종 사상 초유의 우치한 사건"이라고 중앙종회를 비판한 뒤 "종도들을 분열시키고 원로회의까지 부화뇌동케 했다. 지난 7개월 동안 종단을 혼란과 파국에 이르게 하고 길거리 종회를 열어가면서 총

행정부 불신임 사태 장기화
총무원 · 종회 입장 차 여전
최근 임시회 결과로도 갈등
각자 매체 통해 정당성 강조

무원장을 불신임한 것은 원천 무효화됐다"고 주장했다.

총무원은 이어 사건의 주동자로 법담 · 도광 · 지담 · 시각 스님을 지목했으며, 동조자로 상명 · 법신 · 도성 · 탄허 · 남법진 · 방진화 스님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해당 스님들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했다.



올해 초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의 연두백서 기자회견 도중 총무원 측과 중앙종회 측 스님들이 청사 입구에서 대치하며 갈등을 빚은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이 같은 총무원 주장에 중앙종회는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기 위해 이번 혐의 없음 처분 결과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종헌종법으로 인한 불신임은 형사고소, 처벌과는 관계가 없다. 태고종도 총무원장의 여러 문제와 종무수행이 종단에 피해를 주고, 종도들을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종법에 의해 불신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중앙종회는 17일 순천 선암사에서 임시회를 소집하고 총무원장선거법, 선거인단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종무원법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은 보궐선거를 통해 60일 이내에 새 총무원장을 선출토록 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편백운 스님은 "이미 3.14 종회 불신임과 원로회의 인준이 무효이므로, 이번 임시회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처럼 양측 대립이 길어지면서 편백운 스님을 중심으로 한 총무원과 이를 반대하는 중앙종회는 현재 각자의 매체를 통한 장외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편백운 스님은 자신이 발행인인 태고종 기관지 〈한국불교신문〉을 통해 중앙종회의 부당성을, 중앙종회는 〈중앙종회보〉 인터넷판에 총무원장 불신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학교 비판' 고소로 대응한 금강대 내홍

금강대 학생비상대책위
천태종 말사 서신 배포

천태종립 금강대학교(총장 송희연)가 학교 운영행태를 비판한 익명의 학생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익명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 총학생회가 우려의 뜻을 표하면서 학교당국 비판에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0월 초 천태종 산하사찰 약 160곳에 발송된 '승복으로 사리사욕을 감출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서신이다. '금강대학교 학생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발송된 서신에는 △부도덕한 직원채용 의혹 △빈번한 학제개편 △이사회의 비전문성 등 학교 운영과 관련된 문제제기와 이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호소가 담겼다.

이 서신이 배포된 사실을 인지한 대학본부는 총학생회에 비상대책위원회 존재 여부를 물었으나 확인되지 않으면서 논산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우편물 발송자를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이 문제 서신의 주체를 교내 직원으로 규정해 논란의 불씨가 커졌다. 학교 측은 우편물 발송지인 상월



천태종립 금강대학교 본관건물에 걸린 현수막. 직원노조와 총학생회 등이 고소 취하와 관련자 사퇴 등을 촉구하고 있다.

학교 측 '실체 불분명' 해명
"학생대책위 존재 확인 안 돼"
교수협 · 직원노조 대학 비판
"고소취하 · 관련자 사퇴 촉구"

우체국 CCTV 확인결과 입학관리팀 직원이 우편물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직원은 "학생의 부탁으로 우편물을 대신 발송했다"고 해명했지만 학교 측은 진상규명을 위해 경찰수사를 요청했다.

송희연 금강대 총장은 3월 7일 공고문을 통해 "정체불명의 벽보 및 우편물 사건이 대학과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육기관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학생의 이름을 빌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대학의 개혁을 방해하려는 일부 세력의 명백한 해교행위임을 규정하고, 관련자를 법과 학칙이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논산경찰서는 입학관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학교 측도 학생비상대책위원회의 실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4월 10일 학생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학생 2명이 경찰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서신 논란은 새 국면을 맞았다. 결과적으로 학교가 학생을 고소한 모양새가 되자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 등은 대자보를 게시하며 주요 보직자들의 책임을 물었다. 금강대 제16대 총학생회 또한 고소 취하와 관계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 관계자는 "학생들의 사실확인서 제출 이전부터 대책위가 존재한다면 대학본부에 직접 연락을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그럼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실체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며 "경찰 측에서도 사실확인서만으로 사건의 주체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학생들의 행위로 확인된다면 학교는 다른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윤호섭 기자**

